

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 소득 하위 70% 대상
소득 급감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최신 소득 반영도
피부양자 가족,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 5월 지급 목표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검토(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은 건보료로 확정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

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포함) 구성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5원, 3인 19만1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포함)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1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가구	88,344원	63,778원	152,122원
2인 가구	150,255원	147,928원	198,402원
3인 가구	195,200원	203,127원	242,715원
4인 가구	237,652원	254,909원	298,124원
5인 가구	286,647원	308,952원	343,408원
6인 가구	326,561원	349,099원	432,098원
7인 가구	402,261원	426,790원	471,540원
8인 가구	477,059원	482,265원	518,319원
9인 가구	-	490,914원	602,098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가입자의 경우 자산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 셈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이 거론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가르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

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각각 본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원칙만 제시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소득 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정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추가경정예산이(국회에)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보다 소득이 더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아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하위 70% 경제선상에 있는 이들의 소득이 원래는 포함되지 않지만(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그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소득 감소분을 확인해 하위 70%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부담비를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차관은 "지자체도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취지)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넓고 금액도 크다.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뉴스

“선명한 개혁 이루고 고향 전복 위해 노력”

열린민주 최강욱 비례 후보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열린민주당이 선명한 개혁을 이루고 고향 전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2번)가 고향인 전북을 찾아 당 지지를 호소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최 후보는 3일 김의겸·강민정·주진형·김성희 후보 등과 함께 전북도의회를 찾아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고향 전북에 대해 “대학입학 후 30여년 서울 생활을 하면서 전북에 대해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북이 가진 문화수도의 위상, 정치사에서 가진 전북의 위상이 점차 추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복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전북을 찾아 좋은 말씀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전북을 찾은 후보들은 교사의 사학법 개혁, 교사의 참정권 보장 등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특별취재반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신영대, 한국노조 총연맹 노동현안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군산)는 한국노조조합 총연맹 군산시지부(의장 고진곤)와 두 손을 맞잡았다.



지난 3일 신 후보와 고진곤 의장은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사무실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군산시지부는 ▲노동존중 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현,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영대 후보는 “노동 존중 사회는 고용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는 사회로 가자는 약속이자 목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조조합 총연맹과 맺은 이번 협약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 깊이 간직하고 올바른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5인 미만의 사업장 종사자의 노동관계법상에 규정된 권리 보장, 1인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제도 추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금지 제도와 미션 등의 10대 공동협약을 발표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윤준병, “선거유사사무소 재수사? 사실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정읍·고창)가 “지난 2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전북CBS의 공동주최 LG헬로비전 스튜디오에서 열린 ‘선택 2020’ 및



장토론 강대강 토론회에서 유성엽(민생당) 후보가 (윤준병 후보) 유사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재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유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성엽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TV 토론 때 JB포럼 유사선거사무

소와 관련 (윤 후보가) 무혐의 종결처리 됐다고 했는데 (제가) 더 알아보니 재정신청을 거쳐 재수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수사 받고 있는 것 맞나?”라고 윤 후보에게 물었다.

유 후보는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돼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것은 재보궐선거감이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이나 재수사 등의 부분은 (수사 기밀일텐데)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유성엽 후보는 “여러 소문을 통해서...”라며 입수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마을교육공동체’ 등 교육 공약 발표

본격 선거활동에 돌입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3일 교육공약 ‘마을교육공동체’를 발표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서울 노원, 경기 화성 등)에서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교육분야에 직·간접적인 지원과 참여를 늘리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다양한 기관들의 교육 참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 자체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인적·공간적 교육자원을 모아 지역과 마을에 기반한 교육모형을 만들어 이를 학교나 청소년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 마을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마을 내 교육력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 자치 문화공간’을 확보해 소비·문화 공간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사전투표 4월 10일(금)~11일(토)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신분증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발열체크 받고 온소득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